

비과세종합저축규정

<명칭변경 2015. 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한 노안·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저축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의 취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동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정의)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함은 비과세종합저축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모든 예금을 말한다. 다만, 증서 등으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6>

제3조(가입대상) ①이 저축은 세법상 가입이 허용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이의 확인을 위하여 가입시 필요한 제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1. 65세 이상인 거주자(단, 2015년 만 61세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 만 65세 적용)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가입대상은 거주자로서 실지명의의 개인(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의거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한다. <개정 2020.4.13.>

제4조(거래한도) ①이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 16.>

②적립식 저축의 경우 제1항의 한도는 만기납입금 원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또는 자유적립식 예금의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운용한다.

④비과세종합저축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 2017.8.11.>

제5조(분할거래) 비과세종합저축은 제4조에 의한 거래한도내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또는 신용부금등으로 수개의 계좌로 분할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제6조(원장 및 통장관리) 비과세종합저축의 거래신청서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고무인을 압날하여 관리하며, 통장의 표지 또는 내지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 16>

제7조(통보) 상호저축은행은 이 저축계약을 체결, 변경, 해지상황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

제8조(거래한도 초과예금의 처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통보된 거래한도 초과예금은 일반저축으로 전환하거나 해지처리하고 통장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1>

제9조(양도금지) 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를 금지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개정 2015. 2. 16>

제10조(원천징수) ①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는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 2015. 2. 16>

②제8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저축계좌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징수 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제11조(계좌번호의 구분) 삭제 <01.6.10>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예금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0.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7.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저축 가입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추 가 약 정 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엔에이치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인)
주 소 :

채무자는 엔에이치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5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 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2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주소

제 3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규제지역 구분*	주소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해당되는 지역을 기입

제 4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1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전입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 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 7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1.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 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지 않거나,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주2)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